

현장과 시각

광주시-시민단체 파트너십



정후식

사회1부 부장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 간 해묵은 갈등이 최근 잇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주목되고 있다. '한·미 FTA 저지 집회' '청소용역직 해고자 문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극단 신명과의 대립' 등이 그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 '한·미 FTA 저지 집회'를 주도, 시민의 재산인 청사 파손과 공무원 부상 등을 불렀던 광주·전남 운동본부측이 '예기치 않은 피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나서자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시의 이같은 움직임은 '불법 시위 엄단' 방침을 밝히며 운동본부를 상대로 2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관련자 6명의 재산 2억원을 가압류하며 형사 고발까지 했던 것에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태도다. 운동본부측도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역 사회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보다 두 달 전인 지난 5월 23일에는 1년 이상 지역의 최대 갈등 요소로 꼽혀왔던 시청 청소용역직 해고자 문제가 타결됐다. 시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조가 하고 용역직 17명이 시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앞선한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다.

지난 4월 초에는 시와 놀이패 '신명'간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갈등이 시와 예술인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연 활동에 제약이 적지 않았던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보완하기로 함으로써 해소됐다.

민선 4기들어 불거진 이들 갈등은 상당기간 시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201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현지 실사가 임박한 시점까지도 관련 시위가 계속돼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물론 시민사회의 주장이 항상 절대선(善)이거나 법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권 비관을 수용하지 않고는 협력과 소통의 파트너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시의 자세 변화는 갈등의 골을 좁히고 시민화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대응적 조치로 풀이된다. 아쉬운 점은 사전에 이같은 사태를 예방하지 못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던 점이다.

광주시는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접촉면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지역 NGO단체들을 시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이해 증진과 비전 공유를 위해 개최해온 민·관합동워크숍을 연 3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환경·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경우 시민운동본부를 꾸려 장기적 해법을 모색키로 했다.

민선 4기 하반기에는 더욱 촘촘한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 협치(協治)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나가기로 기대해본다.

/ who@kwangju.co.kr

개인정보 900 만건 중국으로 불법유출

중해커에 매일 대출 알선 국내 대부 중개업자 수배

무려 900만건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돼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은행과 대부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산망에서 빼낸 가입자 개인정보를 중국 해커로부터 사들여 대출광고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부중개업자 천모(42.중국도주)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인 줄 알고도 전세를 도와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대부중개업자 신모(42)씨와 이모(여·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중국해커에게 1천500만원을 주고 개인정보 900여만건을 매입한 뒤 작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신용불량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제3금융권 대출을 알선하고 대부업체와 고객으로부터 25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가 사들인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름과 아이디(ID),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용정보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수는 6개 금융기관과 대형 대부업체의 고객정보 485만여건, 12개 중소 대부업체 고객정보 26만건, 615개 쇼핑몰 회원정보 65만여건 등 900만여건에 달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핵심정보는 아니더라도 이름이나 주소 등의 단순 개인정보가 중국 해커에게 유출돼 이스피스나 납치협박 사기 등에 악용된다는 정황은 진작부터 포착되고 있지만 유출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씨 등은 1천500만원에 사들인 이들 개인정보를 2억여원을 받고 다른 대부업체에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는 스팸메일 및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에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조사돼 범죄나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중국 해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으로 달아난 천씨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독도는 주권 미지정 지역”

지명위, 한국령서 분쟁지역으로 돌연 변경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미 지명위원회(BGN)는 지금까지 독도가 귀속된 국가를 '한국(South Korea)'으로 표기해오던 관행을 변경, 지난 주부터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미 지명위원회 홈페이지(http://geonames.usgs.gov)를 확인한 결과, 지난 주까지만 해도 외국지명 검색란에 '리앙쿠르 락스'를 입력하면 독도가 속해있는 국가(country)에 '바다(oceans)'와 '한국'이 나왔지만 지금은 특정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표시돼 있다.

미 지명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한일간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차제에 한일 양국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리앙쿠르 락스를 검색하면 종전에는 리앙쿠르 락스의 변형된 표현으로 독도(Tok-to)라는 이름이 지명위원회 표기 기준으로 먼저 나왔으나, 변경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Takesima) 뒤로 밀려났다.

주미 한국대사관 측은 "미 지명위원회

가 어떻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경위를 파악중"이라며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지명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로 표기하기 시작한 시점은 1977년 7월부터이며, 이는 독도, 다케시마 등으로 혼용돼 온 표기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지명위원회 측은 리앙쿠르 락스라는 표기는 미 연방정부 내에서 사용되는 통일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몰린 베를린 전승기념탑(Siegestaue)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연합뉴스

“외교 경험 우리 불식” “고작 일주일로...”

오바마 해의 순방 마무리...엇갈린 평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일주일 간의 해외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외교여행'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오바마의 이번 순방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동·유럽 순방길에서 오바마는 주요국 정상과의 만남을 매끄럽게 소화하는 한편 가는 곳마다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으며 '외교 분야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특히 약 20만명의 베를린 시민들이 오바마에게 열광하는 모습은 상당수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까지 심어줬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정치자문을 역임한 존 위버는 "이번 일주일엔 매케인의 패배"라면서 "아직까지는 그동안 쌓은 '내공'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런 식의 일주일만 반복된다면 매케인도 역부족"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27일 워싱턴포스트(WP)는 단 일주일 간의 '외교 여행'으로 오바마의 대통령 자질을 가늠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정치 전략가인 알렉스 보겔도 "오바마 측은 유권자들이 상징적 행동을 경험으로 쳐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대담한 희망"이라고 폄하했다.

경선 과정에서 오바마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한 민주당 인사 역시 "외국 지도자들과 몇 번 만났다고 해서 외교 분야의 일정한 경험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실수"라고 일침을 가했다. /연합뉴스

2008 국방백서 '주적' 표기 없기로

국방부 "북한 표현 '2006 백서' 벗어나지 않을 것"

국방부는 연말께 발간할 '2008 국방백서'에 2년 전 백서와 마찬가지로 '주적'(主敵)이란 용어를 표기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27일 "12월 중으로 '2008 국방백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기본안을 작성 중에 있다"면서 "특히 북한에 대한 표현은 '2006 국방백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6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격년제로 발행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장병정신교육 수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국방백서에서 사라진 '주적' 용어가

다시 부활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이 군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백서에 그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의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우리의 최대 주적 국가가 누구냐"라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주적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는 북한을 '현시적인 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와 지금과 같이 심대한 위협이 현실적 실체인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불필요한 내부적인 논쟁이 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겠다"고 말해 '주적' 용어를 백서에 넣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Speech Leadership Course' (스피치 리더십 과정) and 'Business Leader Course' (경영 지도자 과정) by CEO Academy.

Advertisement for 'Business Leader Course' (경영 지도자 과정) by Kwangju University.

Advertisement for 'Business Leader Course' (경영 지도자 과정) by Kwangju University.